

---

## 쿠바 비즈니스 환경과 우리 기업의 대응

기현서

한·중남미 경제협력센터 상임고문, 前 주 칠레 대사

핵심어: 쿠바, 비즈니스, 시장, 기업, 대한민국, 미국, 투자, 중남미, 라틴아메리카

### I. 들어가며

최근 우리 기업의 쿠바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쿠바는 미수교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KOTRA는 2005년 9월 아바나에 무역관을 개설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양국 간에 상당한 수준의 인적 물적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04년 12월 17일 미국과 쿠바가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자 쿠바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우리 기업의 쿠바 시장에 대한 관심도 증대했다.

그러나 쿠바 시장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기초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데다가 현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 진출에는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글에서는 여러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 무역, 투자 등 세 부문에서 쿠바 비즈니스 환경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쿠바 시장에 진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II. 국가 환경

### (1) 역사적 유산: 반세기 넘게 미국에 대항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

쿠바는 인구 11,047백만 명(2014년 추정), 면적 10.6 평방킬로미터의 도서 국가로 미국 플로리다 주 최남단 키 웨스트(Key West)로부터 약 90마일 떨어져 있는 인접 국가이다. 약 400여 년 동안 스페인 식민지로 있다가 1898년 미-스페인 전쟁에서 스페인이 미국에 패한 후 일시 미국의 통치 시기를 거쳐 1902년 5월 20일 정식으로 독립하였다.

이후 쿠바는 1959년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미국의 정치·경제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1959년 친미 바티스타(Batista) 군부정권을 붕괴시키고 집권한 피델 카스트로는 공산주의 정권 수립을 선언하고 쿠바 내 미국 자산을 몰수하였으며 강력한 반미정책을 시행하였다. 미국도 이에 대응하여 1960년부터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작하였고 이후 다양한 입법 조치를 통해 그 강도를 높여왔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제재 조치를 총칭해서 쿠바 경제봉쇄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다.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종식되자 쿠바 경제는 고난의 시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스스로 ‘특별시기(Special Period)’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쿠바 정부는 기간 중 관광산업 개방, 외국인투자 유인, 개

인기업 제한적 허용 등 사회주의 이념에 반하는 시장주의 경제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경제 상황이 다소 회복되자 이러한 조치들을 점차 축소되거나 폐지하였다.

2006년 공산주의 이념에 투철한 피델 카스트로가 건강상의 문제로 2선으로 물러나고 실용주의적 성향의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가 새로운 실권자로 등장하면서 특히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시 시장주의 경제정책이 제한적으로 도입되는 개혁조치가 취해졌다.

2010년 6차 공산당대회와 2016년 7차 공산당대회에서는 쿠바의 개혁개방 정책 방향을 공식적으로 설정하고 승인하였으며 계속 간신히였다.<sup>1)</sup> 단, 개혁개방의 범위와 깊이는 쿠바 정권 지도부 내의 강경론자들과 실용주의자들의 타협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개혁조치들은 쿠바 사회주의 혁명이념의 이름으로 그 운용에는 실제 많은 제한을 수반하고 있다.

2014년 12월 미국과 쿠바 양국은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였다. 곧이어 양국은 대사관 재개설, 정상회담개최, 일부 경제제재 조치 완화 등 관계개선 조치를 실시하여 상호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2016년 11월 쿠바에서는 피델 카스트로가 사망하고 2017년 1월 미국에서는 쿠바에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트럼프(Donald Trump)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국의 관계개선은 다시 불확실한 상황에 접어들게 되었다.

## (2) 중앙집권 계획경제 체제

쿠바는 50년 넘게 쿠바 공산당 1당 독재정권이 지배해왔고 경제도 고도로 통제된 중앙집권 계획경제 체제다. 국영기업이 모든 재화와 서비스 생산

1) 제6차 공산당대회에서 채택된 쿠바경제사회정책방향(Lineamientos de la Politica Economica y Social del Partido y la Revolucion)

을 담당하고 있고 무역과 소비는 국가기관이 규제하고 있다. 특히 쿠바 혁명군(Revolutionary Armed Forces)이라고 불리는 군부가 농업과 서비스 부문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쿠바 헌법상 입법기관은 인민의회(National Assembly of Popular Power)와 국가평의회(Council of State)가 담당하고 있고 집행기관은 각료 회의(Council of Ministers)와 각 부처(Ministries)가 된다. 인민 회의는 최고 입법기관으로 1년에 2회 개회하며 법률(Law)을 제정한다. 같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평의회는 상설기구로 법령(Decree-Law)을 만들 수 있는데 국가평의회 의장이 국가원수 자격을 가지고 있다. 각료 회의는 집행기관 자격으로 명령(Decree)을 각 부처는 이에 따른 결정(Resolution)을 입안 공표할 수 있다. 현재 라울 카스트로가 국가평의회와 각료 회의 의장이고 그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미겔 디아즈-카넬(Miguel Diaz-Canel)이 제1 부의장이다.

외국 기업 측면에서 볼 때 쿠바 측 사업 당사자는 국가고 그 의사결정은 해당 국가기관에서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각 기관별 의사결정의 권한, 범위 그리고 과정을 이해해야만 적절한 경영적 대응을 할 수 있다.

### (3) 취약한 산업구조와 부족한 인프라: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 절실

EIU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쿠바 무역적자는 약 92억 불이다. 수출은 41억 불로 사탕수수, 니켈, 담배 등이 주요 수출품목이다. 수입은 133억 불로 식품, 석유, 공산품(기계 및 장비, 전자제품, 자동차 및 관련 제품, 화학제품) 등이 주종 수입품목이다. 116억 불에 달하는 무역수지 적자는 서비스부문 흑자가 보전해주고 있는데 이 부문의 흑자는 주로 관광수입, 의료인력 수출<sup>2)</sup> 및 해외거주

2) 약 4만 명의 의사가 66개 국가에 진출해 있다.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이 최대 파견국들이다.

자 국민으로부터의 송금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경상수지는 약 15억 불 흑자를 기록했는데 기간 중 대외채무 원금상환액이 37억 불, 이자가 18억 불임을 고려하면 쿠바의 어려운 외환 사정이 드러난다. 특히 그동안 일당 10만 배럴의 특혜 석유를 주어왔던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외환 사정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저축 부족 상황은 현재 쿠바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4~5%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계획된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 운송, 통신, 도로 등 인프라 부문과 농업 및 제조업 부문에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일이 매우 절실하다.

라울 카스트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외국인투자를 ‘쿠바 경제발전’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규정하면서 신 외국인투자법(법률 118호)과 마리엘 특구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그리고 물리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쿠바 정부는 연간 20억 불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 (4)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미국의 쿠바 경제봉쇄정책은 쿠바 혁명정부가 쿠바 내 미국 민간인 자산을 몰수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1960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은 이후 50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입법 조치를 통해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확대해 나갔다.<sup>3)</sup>

3) Foreign Assistance Act(1961), Proclamation 3447(1962), Cuban Assets Control Regulations(1963), Export Administration Act(1979), Cuban Democracy Act(1992), Helms–Burton Act(1996), Trade Sanction Reform and Export Enhancement Act(2000), 각종 Amendment(2009, 2010, 2011, 2012)

따라서 미국의 쿠바 봉쇄정책은 이러한 일련의 제재를 총칭한 것이며 다양한 형태의 법률과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진 다층적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경제봉쇄정책 여파가 단지 쿠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쿠바와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국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92년에 공표된 쿠바 민주화 법(Cuban Democracy Act)은 해외 소재 미국기업의 자회사들이 쿠바와 경제 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1996년의 헬름스–버튼 법(Helms–Burton Act)<sup>4)</sup> 제3국 기업이 몰수된 미국자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쿠바 국영기업과 거래한 경우 미국법에 의해 소추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쿠바 경제봉쇄정책의 최종 목표는 현 쿠바 공산정권의 붕괴다. 미국은 경제봉쇄정책 철폐 조건으로 자유 선거에 기초한 민주주의 실시와 언론자유 보장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라는 것인데 쿠바 입장에서 볼 때 이 조건들이 야말로 지난 50여 년 동안 지탱해온 쿠바 정치 및 사회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매우 좁다. 쿠바 정부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EU, 중국, 역내 중남미 국가 등과 경제 관계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 (5) 쿠바 경제개혁

쿠바는 공산주의 이념에 기초한 중앙집권 계획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하는 경제개혁이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 도입을 의미한다. 쿠바 경제개혁 흐름은 크게 특별시기(1990~2000), 후퇴기(2000~2006) 그리고 라울 카스트로 개혁시기(2006~현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원래 명칭은 쿠바자유민주연대법(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 Act)이다.

### 1) 특별시기: 1990–2000년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하자 그동안 소련의 지원에 의존해왔던 쿠바 경제는 심각한 경제적 난국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쿠바 정부 스스로 ‘특별시기’라고 규정하였다. 참고로 1991~1994년 기간 중 쿠바는 국내총생산이 1/3 감소하는 경험을 하였다.

쿠바 정부는 이러한 경제 난국을 극복하고자 일시적으로 이념을 포기하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시장주의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우선 부족한 외환화보를 위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했다. 광업부문도 일부 시장 개방하였는데 이때 현재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캐나다 셰리트(Sheritt)사가 니켈 생산에 투자한 것이 그 예다. 농업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인이 생산한 잉여농산물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교용증대 방안으로 소규모 가정식 식당 등 개인 자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sup>5)</sup>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쿠바 정부는 헌법도 일부 수정하고 외국인투자법(1995년, 법률 77)을 제정하였다. 1993년에는 미국 달러화 국내 통용을 허용했다. 이 결과 미국에 거주하는 쿠바인들의 송금이 증가하였다.

### 2) 후퇴기: 2000–2006년

경제가 다소 회복하고 베네수엘라가 쿠바의 새로운 후원 국가로 등장하자 쿠바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취해왔던 시장주의 경제정책을 점차 폐기하거나 축소하기 시작했다. 자영업 허가 규모가 줄어들었고 영업 중인 기존 자영업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규제를 늘렸다.

2004년에는 달러화 통용도 중지시켰다. 그 대신 달러화와 동등한 가치를

5) 1996년까지 약 200,000명의 자영업자가 생겨났다.

지난 태환 폐소(CUC)를 발행 사용하고 있는데 달러화를 태환 폐소로 환전할 때 미국에 대한 보복의 상징으로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1 달러를 환전하면 0.9 태환 폐소가 된다. 반면 유로화나 엔화 등에는 환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3) 라울 카스트로 개혁 시기: 2006-현재

2006년 하반기 중 공산주의 이념에 투철한 피델 카스트로가 건강상 문제로 2 선으로 후퇴하고 실용주의적 성향이 강한 라울 카스트로가 정권 전면에 등장하면서 쿠바 경제개혁은 다시 동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우선 라울 카스트로는 경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해제하였는데 여기에는 개인소유 자산과 부동산의 매매, 농업생산 증진을 위한 국유지 임대, 잉여농산물 시장판매 허가, 자영업 확대 조치 등이 포함되었다. 2012년에는 협동조합법을 만들어 농업생산, 수송, 서비스, 제조업 부문에서 민간인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허가를 받으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10월에는 국외 출국허가 제도를 폐지하여 2013년 1월부터 쿠바인들은 자유롭게 출국과 입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라울 카스트로 정부의 경제개혁 조치는 소기의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 앞서 언급한 개혁조치를 지탱해줄 재원의 부족과 물리적 인프라가 미비한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다음에는 어떠한 경제개혁 조치도 모두 사회주의 경제이념과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쿠바 정권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정치적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없다. 시장주의 경제정책의 도입은 단지 사회주의 혁명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sup>6)</sup> 쿠바 정부는 경제적 부를 축적한 중산층의 부상

6) 제6차 공산당대회에서 채택된 쿠바경제사회정책방향(Lineamientos de la Politica Economica y Social del

을 경계하고 있는데 중산층의 증가는 계층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결국은 정치적 불만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쿠바 경제개혁의 방향과 범위 그리고 운용방식은 라울 카스트로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익과 국가의 실질적 경제적 이익이 만나 형성하는 교집합의 크기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교집합의 범위와 수준이 쿠바의 중요한 무역 및 투자환경을 구성한다.

#### (6) 국제경제와 쿠바

쿠바는 북한과 다르게 국제경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지 않고 WTO, ACP, ALADI, ALBA, WIPO 등 역 내외 경제기구에 가입하고 있으며 UN, OAS, LAIA, ACS, CELAC 등 역 내외 정치기구의 정회원국이기도 하다. 또한, 61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sup>7)</sup> 즉, 쿠바 정부는 그동안 국내외 정치·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경제 관계 다변화를 통해 과거에 경험했던 미국 그리고 소련 일변도 의존 경제로부터 탈피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쿠바는 1947년 만들어진 GATT에 최초로 서명한 23개 국가 중 하나이다. 1995년에 WTO가 만들어지면서 당연하게 정회원국가로 가입했다. 따라서 WTO의 최혜국대우세율(MFN Tariff Schedule)이 적용된다. 참고로 쿠바는 1948년에 창설된 미주기구의 창설회원이었다. 그러나 피델 카스트로 정권수립 이후 미국과 반목하면서 1962년에 미주기구 회원자격이 정지되었다. 그러나 역내 중남미

Partido y la Revolución)에서도 모든 개혁 조치는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7)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핀란드 등 유럽 국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역내국가, 중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베트남, 몽고 등 아시아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미주교국으로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회원국의 강력한 요청과 미국의 입장 선회로 2009년에 회원자격 정지상황이 중지되고 다시 회원국이 되었다.<sup>8)</sup>

#### (7) 높은 교육수준의 우수한 인력 그러나 비생산적 인력배치

쿠바 인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항이다. 2014년 유엔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15세 이상 성인 비문맹률은 99.8%에 이르고 있고 초등학교 취학률 98.3%, 중고등학교 진학률 92.1%, 대학교 진학률 47.8%의 매우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등 사회적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고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전문성과 관련이 없는 곳에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어 생산성이 높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 기업들이 쿠바에서 사업을 인력을 고용할 때도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속에서 선정해야 한다.

### III. 무역환경

#### (1) 수입시장 규모

EIU 자료에 의하면<sup>9)</sup> 2011~2017년(전망치) 기간 중 쿠바의 연간 수입규모는 대강 140억 불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인구 940만 명의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입 규모가 약 170억 불 수준임을 감안해 본다면 인구 1,100만을 가지고 있는 쿠바의 수입시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쿠바 수입시장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소비수요가 극도로 억제되어 있다. 따라서 쿠바 혁명 이후 50년 넘게 억눌려온 소비수요에 더하여 전력,

8) 2009. 6. 3. 미주 외무장관 Resolution AG/RES 2438

9) EIU Country Report Cuba June, 2016

통신, 수송, 도로, 주거 등 각종 사회적 인프라 부족과 노후 상황은 앞으로 대폭적인 수입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의 도래는 쿠바의 정치·경제적 상황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례로 일명 올드 아바나(Old Habana)라고 불리는 아바나 구시가지를 상정해 보자. 올드 아바나는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시내에 있는 모든 식민지 시대 건축들이 매우 노화되어 리모델링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경우 소요될 수 있는 건자재 수입수요를 생각해 보라. 쿠바 수입시장은 현재적 가치보다는 미래적 가치가 더 크다.

## (2) 무역의 주체: 국영기업

외국 기업이 쿠바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일은 최초 접촉선을 확보하는 일이다. 정부가 모든 생산과 분배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도 당연하게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이 쿠바와 무역을 한다는 것은 쿠바 정부가 무역 당사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국영무역이다. 따라서 외국 기업이 쿠바와 무역거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영기업을 어떻게 접촉해야 하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쿠바에 처음 진출하는 외국기업에게 매우 생소한 무역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쿠바에서 무역 관련 1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관은 쿠바상공회의소 ([www.camaracuba.cu](http://www.camaracuba.cu))이다. 일반적으로 상공회의소는 민간 기구이지만 쿠바에는 민간 기업이 없으므로 쿠바상공회의소는 사실상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외국 기업이 쿠바와 무역거래를 추진하고자 할 때 일단 쿠바상공회의소를 매개로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기관을 접촉해 나가야한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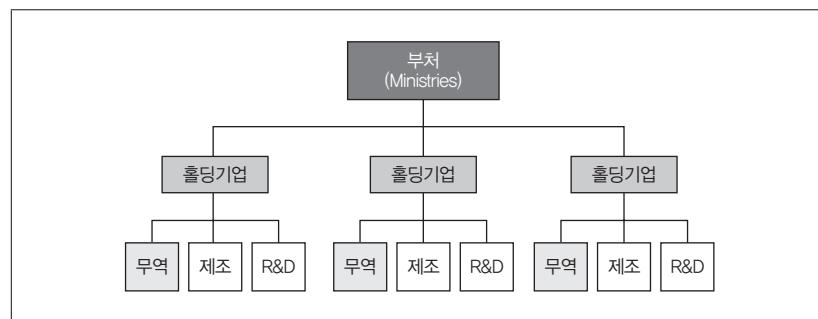
10) 우리 기업의 경우는 쿠바에 소재하고 있는 아바나무역관을 접촉하면 된다.

### 1) 국영기업 구조

쿠바의 각 부처(Ministries)는 산하에 무역, 제조, R&D,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다층적 국영기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홀딩기업을 중심으로 집단화 되었는데 각 홀딩기업 집단에는 무역전담 국영기업이 있다. 무역전담 국영기업은 홀딩기업 집단 내 무역수요를 의뢰받아 외국기업과 무역거래 업무를 수행한다.

쿠바 내 전체 기업규모는 총 1,992개사며 이 중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업 수는 124개사다. 이들 기업이 소위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된다. 그 구성 을 보면 각 부처별로 홀딩기업 집단을 가지고 있고 그 산하에 무역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국방부, 대외무역부, 산업부, 정보통신부, 문화부, 관광부 순으로 무역업체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sup>11)</sup>

〈그림 1〉 부처 산하 기업구조



11) 국방부(홀딩: GAESA) 13개사, 대외무역부(홀딩: GECOMEX) 12개사, 산업부(홀딩: GEIC, GESIME, GEIL) 12개사, 정보통신부(홀딩: COPEXTEL) 11개사, 문화부 8개사, 관광부 7개사, 식품산업부(홀딩: GEIA) 6개사, 교통부 6개사, 에너지광업부(홀딩: UNE, CUPET, CUBANIQUEL) 6개사, 농업부 5개사, 보건부 4개사, 건설부 3개사, 바이오로그룹(BIOCUBAFARMA) 7개사, 설탕산업그룹(AZCUBA) 3개사

## 2) 국영기업 거래절차

쿠바 국영기업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등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판매자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 기업홍보와 함께 해당 국영기업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용이하지 않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판매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정관,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거래은행 레퍼런스, 재무제표, 기업 프로파일, 기타 요구 서류 등이다.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하여야 한다.<sup>12)</sup>

국영기업의 구매입찰은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업체가 선정된다. 기술평가는 수입의뢰 국영기업이 하며 가격평가와 낙찰업체 선정은 무역전담 국영기업이 수행한다. 낙찰이 되면 이어서 무역전담 국영기업과 무역계약 체결을 하고 상품 및 서비스 공급 그리고 대금 지불 및 회수 과정이 이루어진다. 쿠바 국영기업의 일반적인 지급조건은 신용장 360일 조건이며 각 국영기업의 지급여력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 (3) 현실적 상황: 쿠바 내 무역 중개상 역할

국영기업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영기업에 판매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그 과정이 용이하지 않다. 기업홍보, 인맥 만들기, 다양한 서류제출 및 검토, 관료주의, 부패, 늦은 의사결정 등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기업은 양국 간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쿠바 시장에 접근하지만 첫째 이러한 복잡하고 지루한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둘째 불리한 지불조건과 금융거래의

12) 정관,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은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 및 쿠바영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하다.

어려움까지 겹쳐 진출을 포기하기 쉽다.

이 경우 쿠바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개무역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쿠바 내에 지사를 두고 중개무역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은 약 650개사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sup>13)</sup> 이들을 활용하면 앞서 언급한 판매자등록을 할 필요도 없고 대금회수에 대한 부담도 없다. 단 수출업체 마진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참고로 외국 기업이 쿠바에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0만 불 이상의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기업은 대부분 중개무역상을 통한 간접교역을 하고 있다.

#### IV. 투자환경

#####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쿠바 정부 관점 변화 주이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쿠바 정부의 관점 또는 입장은 크게 다섯 단계로 변화해 왔다. 우선 혁명 직후 쿠바 정부는 미국 의존 경제 탈피, 다국적기업 배격, 시장 경제 부정을 주장하며 쿠바 내 미국기업과 자산을 몰수하였고<sup>14)</sup> 미국은 물론이고 기타 외국기업의 쿠바 내 투자를 허용하지 않았다. 당시 쿠바 정부는 외국인투자의 허용은 쿠바의 자주권, 사회주의 계획경제 모델, 마르크스-레닌 그리고 피델 카스트로의 정치 이념에 배치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소련이 붕괴하고 경제가 어려워진 소위 특별시기에 쿠바 정부는 미국을 제외한 캐나다, EU, 중남미 국가들의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

13) 스페인 165개사, 파나마 81개사, 이태리 41개사, 중국 41개사, 캐나다 36개사, 멕시코 34개사, 프랑스 21개사, 독일 19개사, 베진 아일랜드 17개사, 러시아 13개사, 기타 149개사

14) U.S. Foreign Claims Settlement Commission에 의하면 당시 몰수된 미국 자산은 1960년 가격 기준 19억 불에 달한다.

[표-1] 쿠바 정부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관점변화 추이

1기 (Phase1) 1960년대 혁명시기	2기 (Phase2)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시기	3기 (Phase3) 2000년대 반동의 시기	4기 (Phase4) 2000년 중반~말 사회주의 연대 시기	5기 (Phase5) 2011년~현재 양면 가치적 시기
국수주의 외국투자자 자산 몰수	외국인투자 자유화 (외국인투자법 _법률 77호)	외국인투자자유화 축소 및 취소	베네수엘라, 중국, 브라질 등 사회주의 및 좌파 국가 국영기업 연대 강화	경제개혁 및 반부패 추진(외국인투자법_ 법률 118)

출처: Richard E. Feinberg, Open for Business: Building the New Cuban Economy: Five Phases of Cuban Policies to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용하였다. 이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관광, 니켈 등 광업, 소비재 중심 제조업 부문에 외국인투자가 실행되었다. 1995년에는 최초로 외국인투자법(법률 77호)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쿠바 경제가 특별시기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회복하자 피델 카스트로는 다시 사회주의의 이념 우선을 내세우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직간접적인 제한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가 쿠바의 공식적인 국가수반이 되자 외국인투자에 대한 입장이 다시 변화하였다. 즉 ‘외국인 직접투자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쿠바 경제발전에 보완적으로 필요하다는(supplementarily necessary) 논의’가 받아들여졌다. 이후 쿠바는 베네수엘라, 중국, 브라질 등 사회주의 국가 또는 좌파 국가들로부터 오는 산업 및 인프라 투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관점의 획기적 변화는 2011년 4월에 개최된 제6차 공산당 대회다.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쿠바경제사회정책방향’에는 총 313개의 경제사회정책 방향이 있는데 이 중 12개가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것이다. 동 정책방향에서 나타난 쿠바 정부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점을 보면 표면

적으로 ‘외국인투자는 여전히 쿠바 사회주의 경제체제 건설 및 유지를 위한 보완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즉, 외국인 직접투자는 ‘선진기술에 대한 접근, 경영기법의 전수, 수출시장 다변화 및 확대, 수입대체, 고용창출, 외부금융에 대한 접근’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 쿠바 정부는 이 문건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실체적 필요성과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된다. 이러한 입장은 2014년에 제정된 신 외국인투자법(법률 118호)과 2013년의 마리엘 특구법(법률 313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 (2) 외국인투자법: 법률 118호(2014. 3. 29.)

2011년 4월 16일에 개최된 제6차 쿠바 공산당대회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쿠바 정부의 관점이 공식적으로 변화하였지만, 쿠바 정부와 공산당 내부의 강경론자들은 여전히 외국자본의 쿠바 유입에 대한 불신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신은 전술한 12개 정책방향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고<sup>15)</sup> 2014년의 신 외국인투자법(법률 118호)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는 최근 그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지만 강경론자들의 경계와 불신이 공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신 외국인투자법 운용 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검토와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할 것이다. 이 결과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전후 모두 많은 보이지 않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 1) 외국인 투자자 보호

외국인투자 자산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몰수되지 않는다. 공공의

15) 즉, ‘외국자본은 국내저축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다.’, ‘외국자본은 국가계획경제와 조화되어야 하고 국가정책목표를 충족시켜야 한다.’, ‘외국자본에 부여된 프로젝트는 엄격하게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등이다.

이익에 반하여 몰수를 할 경우에도 완전한 보상을 보장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정부의 허가기간 만료 전에 재연장을 신청하면 허가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 2) 부동산 개발과 소유권

신 외국인투자법은 1995년 외국인투자법(법률 77호)과는 달리 외국인이 거주 또는 관광 목적으로 쿠바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은 쿠바에서 주거 임대 또는 관광목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부와 각료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 3) 투자 형태

투자형태는 합작투자, 국제동반자협정, 지사 또는 자회사 등 세 가지가 있다. 합작투자는 쿠바 측과 지분을 나누어 쿠바 법에 따라 별도의 합작회사를 창설하는 것이다. 국제동반자협정은 쿠바 측 회사와 계약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가 쿠바 내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것인데 호텔경영계약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100% 단독투자는 법률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투자가가 원할 경우 매건 대외무역투자부(MINCEX)와 협의를 해야 한다.

#### 4) 경영관련 주요 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형태와 무관하게 소정의 계약기간을 설정하지만 구체적 기간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투자규모, 자본회수기간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하여 계약 시 기간을 결정하는데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면 자동 연장된다.

각종 세제 특혜는 상기한 계약기관과는 관계없이 법률에 일률적으로 규정되

어 있다. 예를 들면 법인소득세의 경우 설립 이후 최초 8년은 완전 면세며 8년 이후에는 15%가 적용된다. 참고로 쿠바 국내법인의 법인소득세는 35%이다. 국방, 교육, 보건, 방송통신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외무역 투자부는 2012년 쿠바 정부가 희망하는 외국인투자를 선정하여 공표해왔는데 이 리스트는 쿠바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매년 갱신하고 있다.<sup>16)</sup>

외국투자기업은 계약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필요시 자산을 타 외국기업 또는 쿠바 기업에 매각하고 자본을 철수할 수 있다.

수출입은 쿠바 내 무역회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다. 단 수출 후 획득한 외환은 국내 외환계좌로 입금되며 수입 시에는 별도로 외환을 배정받아야 가능하다.

지분 소득 및 과실은 자유롭게 본국 송금을 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 실행은 실행 당시 ‘유동성 운용시스템(CL)’의<sup>17)</sup> 여건에 따라야 한다.

### (3) 노동 및 고용관련 사항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및 기술 인력으로 쿠바 이민법상 외국인은 쿠바 노동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쿠바인으로 대우를 받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 노동력을 고용할 때 임의로 하지 못하고 필요한 고용 인원과 요건을 고용전담 관청에 통보하면 고용관청은 관련 인력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한 후 보내주는데 이때 고용하면 된다.

임금도 외국인투자기업이 고용전담 관청에 태환 폐소(CUC)로 일괄 지불한다. 고용전담 관청은 지불받은 태환 폐소 임금을 피고용자에게 그대로 지불하지 않

16) Cartera de Oportunidades (Portfolio of Opportunities) 2016–2017.

17) Capacidad de Liquidez (Capacity of Liquidity) System

고 같은 숫자만큼의 쿠바 폐소(CUC)로 지급한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이 600 태환 폐소(CUC)를 지급하면 고용관청은 피고용자에게 600 쿠바 폐소(CUC)을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환율이 1 태환 폐소(CUC)가 24 쿠바 폐소(CUP)인 것을 감안하면 1불당 23 쿠바 폐소는 정부가 수거해가는 셈이 된다.

#### (4) 2016–2017년 쿠바 투자기회 명세표

쿠바 대외무역투자부가 선정 발표한 2016–2017 쿠바 투자기회 명세표에는 총 395개 프로젝트가 열거되어 있다. 이를 세분해 보면 관광 114개, 석유 87개,

[표-2] 쿠바 투자기회 명세표(2016–2017)

분야	프로젝트 수	프로젝트 예시
관광	114	호텔, 빌라, 리조트, 골프장 신축/리모델링/경영, 승마클럽, 에코단지 건설 등
석유	87	유전 탐사 및 개발(멕시코만 심해유전, 연안, 내륙)
농업 및 식품	76	가축사육, 가공, 양계, 과일재배, 쌀생산 등
에너지	22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등
산업	16	전등, 스포츠용품, 종이, 차량, 밧데리, 태양광 패널, 전선, 몰드
바이오 의약	15	의약품 개발 및 생산
광업	13	지질탐사, 광물개발 등
수송	10	크루즈 항구개발, 조선소 운영, 선박정비센터 등
건설	10	건자재 생산, 중장비 정비소, 판넬 제조 등
상업	7	도매유통(하드웨어, 건자재, 자동차 부품, 원단), 냉장차 등
물 관련사업	5	생수생산, 파이프 생산 등
시청각	3	VOD 서비스, 시청각 센터, 방송 인프라 개선 등
보건	3	의료관광센터 구축, 스포츠 의학 서비스 등

출처: 아바나 무역관 정덕래 관장, 쿠바시장 접근전략(2017. 2)

농업 및 식품 76개, 에너지 22개, 산업 16개, 바이오 및 의약 15개, 광업 13개, 운송 10개, 건설 10개, 상업 7개, 물 관련 사업 5개, 시청각 3개, 보건 2개 등이다.

#### (5) 마리엘 특구(Mariel Special Zone)

쿠바 정부는 2013년 9월 법률 313호를 통해 마리엘 특구(Mariel Special Zone)를 설치하였다. 마리엘은 아바나 서쪽 30마일 지점에 위치한 항구지역으로 특구로 설정된 전체 지역의 규모는 약 465.4 평방 킬로미터 이다.

마리엘 항구에는 현재 브라질 정부의 지원으로 대형 컨테이너 부두가 건설되었고 창고와 경공업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준비되었다. 기타 철도를 포함한 인프라도 마련되고 있다.

마리엘 특구법(법률 313호)과 신 외국인투자법(법률 118호)은 쿠바 정부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양대 축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마리엘 특구법은 신 외국인투자법보다 6개월 전에 공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 외국인투자법에 포함된 제반 특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신 외국인투자법에 포함되지 않은 특혜도 있다.

##### 1) 투자 주체 및 형태

외국인 및 쿠바인 모두 마리엘 특구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형태는 신 외국인투자법에 언급된 세 가지 투자형태 모두 가능하나 쿠바 정부는 합작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마리엘 특구 내 100% 외국인자본 투자는 신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경우보다 더 용이하나 이 경우 각료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쿠바 업체의 투자는 대외무역투자부의 결정(Resolu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 합작투자 및 국제동반자협정의 경우 투자주체가 특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특구청장은 사전에 구성된 위원회 승인을 거쳐 기업설립을 허가한다.

## 2) 허가의 종류

허가의 종류는 양허(Concession)와 사용자허가(User Permit) 두 가지만 존재한다. 양하는 주로 발전, 수송, 통신, 건설, 특구 내 기타 인프라 서비스 부문에 라이선스를 주는 것이며 사용자허가는 제조, 보세무역,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구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다. 특구청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 3) 수입관세

특구 내에서는 기자재 및 중간자재 수입관세가 전면 그리고 계속 면제된다. 이는 신 외국인투자법 상 외국인투자가가 특구 외 지역에 투자할 경우 최초 수입 기자재만 면제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마리엘 특구 입주업체가 수입하는 자동차와 운송용 차량의 수입관세도 면제되는가 여부는 특구법에 명시되지 않아 현재 불확실한 부분이다.

## 4) 면세

특구 내 기업의 법인소득세는 10년 동안 면제된다. 이는 신 외국인투자법의 8년보다 더 길다. 면세기간이 끝나면 12%의 법인소득세율을 적용받는데 이 경우에도 신 외국인투자법의 15% 보다 낮은 수준이다. 판매세와 공공시설사용세도 면제된다.

## 5) 노동

신 외국인투자법과 동일한 조건이다.

## 6) 은행

특구 투자업체는 미국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행을

통한 금융거래를 수행할 수 없다.

#### (6) 기타

2013년 마리엘 특구법, 2014년 신 외국인투자법이 공표된 이후 쿠바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성과를 보면 쿠바 정부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 긍정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쿠바 국내외적인 장애요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까지 성과를 보면 재투자 14건, 마리엘 특구 투자 승인 15건, 마리엘 특구 외 지역 투자승인 54건 등으로 약 13억불 수준이다.<sup>18)</sup> 쿠바 정부는 매년 약 20억불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V. 우리 기업의 대응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쿠바는 그다지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다. 우선 인구 1,100만 명, GDP 897억 불(2015 잠정, EIU)의 소규모 시장이고 우리 기업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회주의 국영무역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다. 또한, 미수교국인 관계로 은행 간 거래도 없어 직접교역도 어렵다. 쿠바 측 무역대금 지불조건도 매우 불리하다.

또한, 오바마 2기 정권 때부터 개선되기 시작한 미국과의 관계도 공화당의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주의 이념에 투철하고 카리스마가 강한 피델 카스트로가 사망했으므로 향후 쿠바 정권이 보다 과감한 개혁개방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하지만 2008년 라울 카스

18) Cuba: Open to Foreign Investment, Idalberto Aparicio Gonzalez, Mincex 외국인투자부국장

트로 집권 이후 정치 및 경제 권력을 과점하고 있는 사회주의 기득권층(Socialist Oligarchy)<sup>19)</sup> 과연 기득권을 위협하게 될 개혁개방을 할 것인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수교 관계도 쿠바 정부의 정치적 이념 그리고 쿠바-북한 관계, 대미 관계 등 사안들이 얹혀 있어 그 전망이 밝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우호적인 무역투자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이 비용과 시간을 감수하며 쿠바 시장에 진출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진출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본 장에서는 이 의문에 대해 그 이유와 방향을 정리해 본다.

#### (1) 진출환경을 구성하는 한-쿠바 수교 전망: 미수교 상황 당분간 지속

쿠바는 1949년 7월에 한국 정부를 승인하였으나 1959 쿠바 혁명 이후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그 이후 양국은 미수교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재수교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까지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양국 간 경제 및 문화 교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선 경제 교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자동차, 가전, 타이어 등이 캐나다, 파나마 등 제3국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교역 형태로 쿠바시장에 진출한 이래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05년~2007년 기간 중 현대중공업이 이동식 컨테이너 발전기 총 544 대(총 7억 5,000만 불)를 수주받아 2010년까지 설치를 진행하여 쿠바 정부로부터 근 호평을 받기도 했다.<sup>19)</sup> 또한, 삼성, LG 가전 및 통신 제품의 현지 성가도

19) 현대중공업의 발전기 납품으로 인해 쿠바전력 상황이 크게 호전되어 태환폐소인 CUC 지폐(10 CUC) 도안에 현재중공업의 발전기 그림이 사용되는 등 현대중공업의 사례는 한국제품이 쿠바시장 진출에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손꼽힌다.

매우 높고 현대, 기아차도 2014년까지 연간 3천 대 이상 판매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15년 기준 한국의 대 쿠바 무역규모는 수출 5,150만 불, 수입 560만 불로 쿠바의 22위 교역대상국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 베트남에 이어 3위이다.

2005년 9월 KOTRA는 아바나에 무역관을 설치했다. 미수교 관계에도 불구하고 쿠바 정부가 아바나무역관 설치를 허가한 것은 한국을 일단 경제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경제 관계 확대를 희망한다는 상징적인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KOTRA도 아바나무역관 설치를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아바나 국제박람회(FIHAV)에 꾸준히 참가하면서 쿠바 정부를 설득하고 경제협력확대에 대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개설활동을 추진해온 바 있다.<sup>20)</sup>

양국 간 재수교 문제가 원활하게 진전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쿠바 정부의 한국에 대한 인식문제가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즉, 쿠바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공산주의 이념에 기초한 강한 연대의식을 보여주면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견고한 동맹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sup>21)</sup>

이러한 인식은 쿠바 정부 및 공산당 내부의 강경론자들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데 향후 쿠바 지도층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현재 전망하기 어렵다.<sup>22)</sup>

2016년 6월 한국 정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아바나에서 개최된 제7차 카리브국가연합(ACS) 정상회의(2016. 6)에 옵서버로 참석하는 계기를 활용하여 양

20) KOTRA는 2002~2003년 기간 중 멕시코 소재 중남미지역본부를 통하여 아바나 무역관 설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2004년 협약을 맺고 2005년 설립을 완료하였다.

21) 필자가 2003년 아바나 무역관 개설 가능성 타진을 위해 쿠바 외무부 벨라스코 아태국장 면담 시 그는 '한국과 쿠바는 적(Korea and Cuba are enemies)'이라고 말했다.

22) 2016년 라울 카스트로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국가평의회 제1부의장인 미겔 디아즈 카넬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에 연대감을 표시한 바 있다.

국 외교부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재수교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참고로 북한과 쿠바는 1960년 8월 수교하였고 이듬해 상호 상주공관을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쿠바 정부는 오랫동안 북한과 반미 공동전선을 형성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북한을 지지해 왔다.<sup>23)</sup> 최근에도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2013년 북한 청천강호 파나마 억류 사건으로 드러난 양국 무기거래, 북한–쿠바 바터무역협정체결(2016. 1), 디아즈 카넬(Diaz Canel) 국가평의회/각료회의 제1 부의장 북한방문(2016. 5), 피델 카스트로 사망(2016. 11)시 3일 애도 기간 선포 그리고 김정은 쿠바대사관 조문 등이 그 상징적인 사건들이다.

쿠바 정부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 북한은 군사 및 정치적 동맹 관계, 한국은 경제적 협력 관계를 추구한다는 투 트랙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쿠바–북한 간 우호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쿠바의 대미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는 없다.<sup>24)</sup> 오히려 쿠바 정부는 대북 외교행위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면서 미국이 쿠바에 요구하고 있는 자유 선거에 기초한 대의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실시 등을 거부하고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듯하다.

## (2) 진출해야만 하는 이유: 쿠바의 전략적 가치

쿠바는 50년 넘게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면서 21세기 글로벌 경제체제

23) 1960년 체 계바라 방북, 1986년 피델 가스트로 방북, 1988년 서울 올림픽 보이코트, 1968년 라울 카스트로의 ‘쿠바와 북한은 모든 관점에서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발언 등을 들 수 있다.

24) 브루노 로드리게즈(Bruno Rodriguez) 쿠바 외무장관은 2016년 3월 ‘쿠바는 서방세계의 국내문제 간섭을 배격한다는 입장에서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정권에 연대감을 표시 한다’라고 발언했고 같은 해 5월 24일 미겔 디아즈 카넬 국가평의회 제1 부의장이 쿠바 공산당 사절단을 인솔하여 방북, 북한 노동당과 회담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몇 가지 미래의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미국,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미래 가치를 우호적인 진출환경으로 평가하고 있다.

첫째 50년 동안 얹눌린 소비의 폭발 가능성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비는 민간부문 소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지출을 포함한다. 식품, 가정용 전기·전자, 통신, 의류 등 일반 소비재에 대한 민간소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공부문에서도 전력, 통신, 운송 및 도로, 도시 재개발,<sup>25)</sup> 관광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 쿠바의 비교우위 산업이다. 바이오·제약, 신생에너지, 유전개발, 관광산업 등이 그것들인데 쿠바의 미래가 걸린 산업이다.

쿠바는 전체의약품 수요의 65%를 자체생산으로 조달하고 연간 6억 불을 수출할 정도로 바이오·제약 산업이 발달해 있다. 해외 50여 개 국가에 800여건의 의약품을 등록했으며 1,800여 개의 특허를 취득했다. 18개국 30개 해외병원과 협력하여 의약품을 임상실험 중이고 기술이전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백신에 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목적으로 5만 명의 의료진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는데 이 중 27개 국가에는 상업적 목적을 가진 의료서비스 수출이다.

쿠바 서부지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는 ‘North Cuban Basin’ 지역에는 약 46억 배럴의 원유, 9.8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 9억 배럴의 액화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6)</sup> 쿠바 정부는 이들 지역의 원유 및 가 탐사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의 기술과 자

25)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올드 아바나(Old Habana)가 리모델링 된다고 생각해 보라. 얼마나 많은 건자재 수요가 발생할 것인지.

26) 미국 지질조사국(USGS 2004년) 발표.

본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쿠바는 일당 5만 배럴의 원유와 2만 배럴의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내수에 사용하고 있다.

쿠바 정부는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광 에너지 부문에 외국인투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전력생산의 95%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쿠바 정부는 자국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바이오매스(사탕수수), 풍력, 태양광을 활용한 신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현재의 4.65%에서 2030년까지 24%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별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sup>27)</sup>

관광산업은 쿠바의 최대 자금원(Cash-box)이다. 2015년에는 352만 명의 관광객이 입국하여 약 25억 불의 관광수입을 올렸다. 특히 미-쿠바 관계 개선으로 2016년 상반기 중 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83.9% 증가했는데 향후 쿠바 관광산업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관광 인프라 건설이 시급하다. 현재 쿠바가 보유하고 있는 호텔 객실 수는 64,000실(65%는 4성급 이상)인데 2030년까지 108,000실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중 30,000실은 외국인투자에 의존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스페인, 중국 등의 관심이 높다.

셋째 쿠바는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카리브 국가이다. 현재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를 받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미국과 관계가 원만해지면 미국 시장에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리엘 특구의 미래적 가치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쿠바가 가지고 있는 카리브 지역 중심 국가적 위상과 높은 수준의 인력을 고려한다면 그 전략적 가치가 더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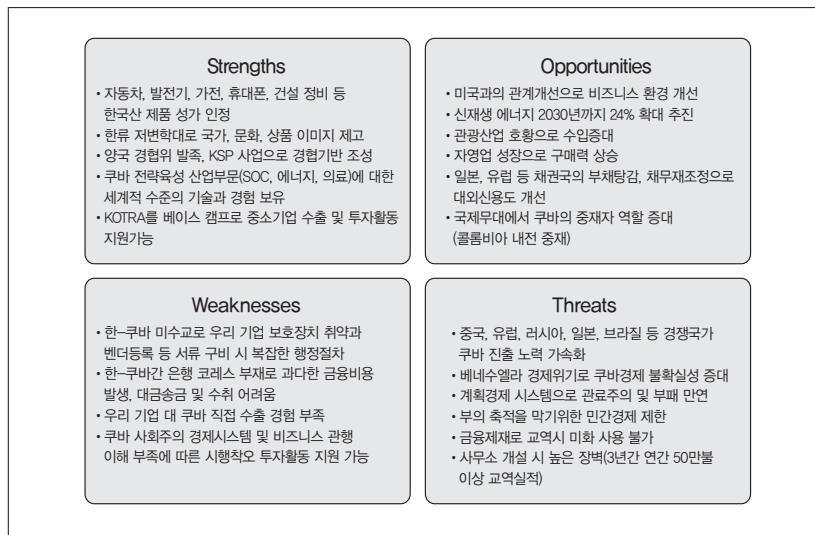
27) 2012. 12. 대통령 3호로 '2014-2030 신생에너지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위원회 창설'령, 2014. 6. '신생에너지개발정책' 각료회의 승인, 2014. 6. 인민의회 승인, 2016. 11.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제안

### (3)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진출의 방향

#### 1)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본 쿠바 진출환경 분석

KOTRA 아바나 무역관이 분석한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본 쿠바 진출환경 SWOT 분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쿠바 SWOT 분석



출처: 아바나 무역관 정덕래 관장, 2017 쿠바 진출전략(2017. 2)

#### 2) 진출의 방향

##### 가) 수교 전략

한-쿠바 국교수립은 우리 기업이 쿠바에 진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환경이다.

국가 간 외교 관계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해결 창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쿠바와 수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쿠바 정부는 현재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배경에는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쿠바 정권의 사회주의 이념 그리고 국제정치적 여건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경제 및 문화교류는 계속 확대하고 있다. 지식공유사업(KSP)도 추진하고 있고 한-쿠바 경제협력위원회도 발족하였다.

그렇다면 수교에는 미온적이면서 기타 부문 교류확대를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추측과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쿠바 정부의 사결정기구 내부에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있는 혁명세대 원로 강경론자(hardliners)들의 영향력이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쿠바 수교와 같은 정치적 의사결정 사안은 확실하고 객관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실용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장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공격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이 얘기하는 소위 ‘단계적 접근(Step by Step Policy)’의 배경이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도 쿠바 관료들을 상대로 하는 조급한 접근보다는 자연스럽게 수교여건을 조성시키는 것이 빠른 길일 수 있다. 즉, 쿠바가 필요하고 원하는 부문을 찾아 경제협력을 강화해주면 실용주의자들이 강경론자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교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sup>28)</sup>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한곳에 고도로 집중되어 정치

28) KOTRA는 아바나 무역관을 개설하기 위해 2002~2003년 중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고 그 결과 2004년 아바나 무역관 개설 허가를 받아 2005년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적으로 분석되고 평가된다.<sup>29)</sup>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 및 민간 부문도 쿠바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분명한 전략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면 쿠바 정부는 한국과 함께 추진되는 사업들의 전략적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신호로 인식하며 객관적인 수교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쿠바 관련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합동기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나) 수출

우리 기업이 쿠바 국영기업과 무역거래 할 때 애로사항은 크게 세 가지인데 1년 외상거래 요구, 국영기업 인맥형성, 쿠바 은행 발행 L/C 인수거절 등이 그것들이다. 여기에 미수교 상황과 경험부족이 더해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과 쿠바 국영기업 간 직접교역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은 자금력과 경험이 많은 외국 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중개상을 활용할 경우 앞서 언급한 애로사항들이 해소되나 이윤은 낮아질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현재 쿠바 내에는 58개국 650개의 외국 중개상 연락사무소가 있다. 쿠바와 교역하는 140여 개 우리 기업 대부분이 이들을 통한 간접교역을 하고 있다.

한-쿠바 은행 간 거래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은 쿠바 은행과 환거래약정이 없기 때문에 쿠바 은행 L/C를 우리 은행이 인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제3국 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외국계 은행을 통지 은행으로 하거나 컨펌 은행으로 지정하

29) 각료회의 및 국가평의회

기도 하는데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하여 수출단가에 영향을 미친다.

중장기적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지사를 설립해야 한다. 지사를 설립하면 수출입 권한을 가진 120여 개 쿠바 국영기업에 판매자 등록을 한 후 입찰을 통해 수주를 할 수 있다.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3년간 연평균 50만 불 이상의 직거래 실적 누적이 필요하다. 우리 수출 유망품목은 의료기기, 에어컨, 독립식 발전기, 식품가공기계, 식품포장기기 및 설비, 스마트폰, 전자재 등이다.

#### 다) 투자

쿠바 정부는 '신 외국인투자법'과 '마리엘 특구법'을 양축으로 하여 매년 20억 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역내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투자승인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쿠바 투자는 쿠바 정부가 필요로 하는 중점투자분야인지 여부를 먼저 분석하고 접근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

쿠바 정부는 매년 11월 '투자 포트폴리오'를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프로젝트 개요, 담당 쿠바기업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뒤 관련 기관과 서면접촉, 방문상담, 협상 등을 추진하면 된다.

앞서 언급한 쿠바 투자환경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투자를 위한 쿠바의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국내외적 정치경제 환경은 매우 취약하다. 참고로 쿠바에 투자 진출한 기업들은 투자 이전 이미 오랫동안 수출 그리고 서비스 계약 등을 통해 쿠바 시장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 투자와 치밀한 시장조사가 없이 선부른 쿠바 투자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 참고 문헌 |

- 김진오 2015, 최근 쿠바 정치경제 현황 및 전망
- 정덕래 2017, 쿠바 비즈니스 접근전략
- 정덕래 2016, 2017 쿠바 진출전략
- Blair Turner 2016, Latin America: The World Today Series 2016–2017
- Brian Blout and Olwyn M. Blouet · 2010,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 Systematic and Regional Survey
- David L. Clawson 2006,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Lands and Peoples
- EIU 2016, Country Report Cuba
- Gary Clyde Hufbauer and Barbara Kotschwar 2014, Economic Normalization with Cuba
- Idalberto Aparicio Gonzalez , Cuba: Open to Foreign Investment
- Law No.118 Foreign Investment Act
- Mauro Guillen, Mauro Diaz Cala and Gustavo Arnavat 2015, The Road to Cuba: Purocuba 2016, Oferta Exportable de Bienes y Servicios
- Richard Fineberg 2016, Open for Business: Building the New Cuban Economy
- Rosell Guerra Campana,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Sources in Cuba
- Samuel Ramini 2016, The Diplomat: The North Korea–Cuba Connection
- Sergio Guerra Vilaboy and Roberto Gonzalez Arana 2015, Cuba a la Mano
- SINERLEX 2014, Foreign Investment in Cuba
- The Opportunities and Risks for US Business